

鄭·孫·李 강경대치속 정상화 탐색

鄭 “판 지킬 것” 孫 “지켜볼 것” 李 “토론 참석”

과적으로 치달던 대통합민주신당 경선과정이 8일 이 해한 후보측이 전환적인 자세를 보이면서 정상화 기조로 돌아서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낳고 있다.

다만 손 후보측은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당의 진상조사 의지가 미흡한 수준인데다 공정선거 환경이 제대로 조성되지 않았다면서 좀 더 당의 태도를 지켜보겠다는 유보적 입장을 피력,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각 캠프는 상대 캠프의 불법·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날선 공방을 계속해 경선 정상화가 이뤄지더라도 캠프간 물고물리는 공방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측은 손·이 두 후보의 공세에 맞서 두 후보의 경선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수사의뢰를 압박하는 등 역공 드라이브도 병행했다.

정 후보측은 특히 부산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측이 선거인단과 조직력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손 후보측은 손·이 두 후보의 공세에 맞서 두 후보의 경선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수사의뢰를 압박하는 등 역공 드라이브도 병행했다.

정 후보측은 손·이 두 후보의 공세에 맞서 두 후보의 경선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수사의뢰를 압박하는 등 역공 드라이브도 병행했다.

손 후보측은 손·이 두 후보의 공세에 맞서 두 후보의 경선 불복 가능성을 제기하고 불법·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수사의뢰를 압박하는 등 역공 드라이브도 병행했다.

손 후보측은 이날 오전 당지도부를 면담해 ▲경선이 치러질 8개 시·도의 불법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수사 촉구 ▲하나의 휴대전화 번호로 여러 명의 선거인단이 가입된 8만4천건 사례에 대한 정수조사 ▲중앙선관위 관리분과 당 관리분에 이중등록된 선거인단 2만5천명에 대한 조사 ▲모바일 투표용지를 위한 불법 콜센터 운영 의혹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14일 경선불참이란 초강수를 두는 것은 여론의 역풍에 직면할 수 있는 만큼 당 지도부가 불법 선거인단 의혹에 대한 문제제기를 일점 정도 수용하면 이를 명분으로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타협론

각 후보간 감정의 골 깊어져 경선 복귀하면 공방 더 거셀 듯

도 나오고 있다. <이해찬, “토론회 참석하겠다”>=전날까지 토론회 불참 등 강수로 일관하던 이 후보측의 태도변화가 확연히 드러났다.

김형주 대변인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여러 캠프에서 제기하는 문제에 임하고 있고 대리인을 통해 (이견이) 해소되는 과정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일 토론회는 참석하는 것을 기조로 한다”고 경선일정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그러나 정 후보에 대한 공세는 한층 강화했다. 이 후보측은 전날 정 후보측 노용래 대변인이 “이 후보측이 부산에서 선거인단 1인당 1만원의 매표행위를 했다”고 한데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노 의원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대통합민주신당 국민경선이 위기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8일 대구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 참석한 정동영 전 장관이 혼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문국현 창당행보 가속화

김태홍·최재천의원 등과 오찬 ‘청년 모임’ 여성계 지지 선언

범여권 ‘장외후보’로 분류되는 문국현 전 유한컴퍼니 사장이 11월 초로 예정된 독자 창당을 위한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다.

문 전 사장은 대선 공약에 준하는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역 정치인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있다. 그의 주변에서는 지지조직인 ‘창조한국’이 의원연을 확대하고 시민사회 인사들의 문 전 사장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면 서 세뵈미를 측면지원하는 양상이다.

문 전 사장은 8일 오전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정책간담회를 갖고 환동해 경제협력 벨트 구상을 밝혔다. 골자는 ▲APEC(아태경제협력체) 회의 개최지인 블라디보스토크 재건 ▲한동해 전력망 구축 ▲한동해 물류망 구축 등이다.

그는 이날 낮에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태홍 제종길 최재천 의원 등 개혁성향의 범여권 의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문국현 신당’의 향후 전망과 올 대선 한때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문국현과 함께하는 청년모임’ 회원 1천219명이 지지를 선언한데 이어 8일에는 김제남 전 녹색연합 사무처장,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이정자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 상임대표 등 여성계 인사들이 프레젠테이션에서 지지 회견을 열었다.

문 전 사장은 오는 14일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가진 뒤 시·도당 창당을 거쳐 내달 4일경 중앙당 창당 작업을 완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조한국’이 지역에서 지지기반을 다지고 정치권에서는 범여권 의원들이 단계적으로 합류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원혜영 이계안 제종길 의원 등이 문 전 사장을 돕고 있다. 문 전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미 합류한 의원에 4~5명의 의원이 창당 전에 합류하고 나머지 50~60명이 우리 쪽으로 올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한편 문 전 사장은 월간조선의 기사로 자신의 명예와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월간조선 10월호의 발행 및 판매, 배포 금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10월호에서 ‘추적, 문국현의 대선 출마선언과 스톱업’이라는 기사를 통해 문씨가 자신의 60억원대 스톱업선 행사를 위해 대선 출마 시점을 늦춰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제까지 토론회 참석하지 않았던 정동영 전 장관이 혼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손학규, 이해찬 후보는 불참했다. /연합뉴스

鄭·李 35년 우정 깨지나

서울대 문리대 72학번 동기 지난달 TV토론서 감정싸움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경선이 이전투구 양상으로 흐르면 서울대 문리대 72학번 동기인 정동영, 이해찬 후보 두 사람

의 오랜 우정이 파탄지경에 놓였다. 정 후보는 MBC 기자로 활동할 때 당시 평민당, 국민회의 국회의원이던 이 후보와 우정을 이어왔고 정 후보가 9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회에 입당, 정계에 입문하는 과정에서는 이 후보가 적극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한 것은 이 후보와 천정배 의원이 맞대결을 펼쳤던 2004년 5월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정 후보가 ‘천·신·정(천정배, 신기남, 정동영)’의 일원이던 천 의원을 도우면서부터다. 지난해 3월 ‘이해찬 총리 골프 파문’때 당시 우리당 의장이던 정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에게 총리 사퇴를 건의하면서 두 사람 간의 감정의 골은 깊게 패었다.

대선후보 경선 초반만 해도 두 사람은 서로 친구 사이임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려 애썼다. 그러나 경선전이 본격화하면서 두 사람은 친구 사이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감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 TV토론서 정 후보가 “이 후보와 저는 서울대 동기로서...”라고 하자 이 후보가 “아, 친구가 이야기 좀 그만 하세요. 공적인 자리에서...”라고 화를 버럭 내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졌고 이어 이 후보는 “(정 후보는) 정말 나쁜 사람”, 정 후보는 “(이 후보가) 요즘 사람이 바뀌었다”며 날을 세웠다. /연합뉴스

명의도용 경찰수사 어떻게 돼가나

노무현 대통령 등의 명의도용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정동영 후보 캠프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로까지 이어지면서 경찰의 수사 범위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 제시도를 검토하고 캠프 관계자 소환을 통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8일 현재 경찰 수사는 크게 두 갈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 번째는 명의도용에 정 후보 캠프의 어느 선까지 관여했는가를 밝히는 것. 현재까지는 구술된 종로구의원 정인훈(여·45)씨와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전 열린우리당 종로지구당 당원협의회 총무 김모(34)씨 외에 정동영 후보 경선캠프 관계자들이 과연 ‘어느 선’까지 이번 사건에 연루됐는가 하는 문제다.

경찰은 정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명의도용을 지시했거나 명단을 넘겨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경찰은 정 후보 캠프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핵심 관계자가 이번 사건에 연루됐거나 일부 캠프 관계자들이 조직적으

鄭캠프 ‘조직적 개입’ 의혹 규명 주력

로 명의도용을 지시·방조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8일 정인훈씨에게 캠프 내 아르바이트 일 선을 요청한 정 후보 캠프의 최모씨에 대해 소환을 통보했다.

두 번째 수사 방향은 명의도용 사건의 범위를 규명하는 것. 지금까지 종로구의원 정씨와 아르바이트생들이 8월 하순 저지른 명의도용의 규모는 522명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씨 등은 김씨로부터 8월13일 넘겨받은 800여명의 명단 중 이미 선거인단 등록을 마친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명의로 허위 등록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특히 경찰은 김씨가 800여명의 명단을 정씨로부터 돌려받은 뒤 이를 파쇄한 것을 확인, 명의도용을 숨기기 위한 증거인멸이 시도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가 2005년 7월 열린우리당 서울시당에서 받은 종로지

구당 기간당원 명단에 4천여명이 올라 있었다. 즉 김씨가 확보했던 기간당원 명단 중 3천200명 분량의 용처가 불분명한 상태라는 것이다.

경찰은 이런 정황으로 미뤄 김씨가 나머지 3천200명 명단을 이용한 허위등록을 실행하기 위해 정치 이외에 다른 사람을 동원하려고 시도했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특히 이번 사건이 종로구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벌어진 명의도용 사례 중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이날 종로구의원 정씨의 검찰송치 기한인 12일에 맞춰 수사를 마무리 짓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 의료안내. A large advertisement for medical services in Gwangju, listing various hospitals and clinics with their specialties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es a header with a sunflower illustration and the slogan 'Beautiful medical culture, opening the best medical service for a healthy local society'.